

전북 방문한 김동연 민주 대선 경선후보

“가능성 큰 전북, 녹색경제 수도로 만들겠다”

‘농업·바이오·기후산업’ ABC 전략 중심
새만금 인프라 재가동·동서철도 조속 추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지원 등도 내걸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김동연 경기지사가 24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을 찾아 권리당원과 참석한 기자들에게 전북 지역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민주당 전북자치도당 컨퍼런스 룸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권리당원들에게 “전북은 대한민국의 가능성이 가장 큰 땅”이라며 “녹색 생명산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지역으로 전북을 키우겠다”고 말했다.

공약의 핵심은 ‘ABC 전략’으로 요약된다. 농업(Agriculture), 바이오(Bio), 기후산업(Climate Tech)을 3대 축으로 설정하고, 전북을 대한민국의 ‘예코 수도’로 도약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는 “농업, 바이오, 기후산업은 미래 경제의 핵심이며, 전북은 이제 가치를 모두 갖춘 유일한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농업(Agriculture)과 관련해 전북을 식량주권 수호의 전초기지로 만들겠다고 말하며, 기후 위기 시대에 대비해 전농농업을 기후농업·기술농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의 스마트 팜 실증단지 확대, 기상이변 대응형 종자 개발, 기후작

물 R&D 강화 등을 통해 전북을 미래 농업의 선도지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또한 전북대·원광대를 중심으로 한 농생명 특화대학 조성과 청년농업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도 함께 추진된다.

그는 “농업을 산업화하고, 가공·유통·수출까지 연결하는 ‘아시아 농생명 산업벨트’를 전북에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바이오(Bio)와 관련해서는 전북을 생명산업 중심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해 김 후보자는 2004년 무산됐던 전북 바이오 특화단지 구상을 다시 꺼냈다.

전주(기초연구)·익산(생산·가공)·정읍(임상·실증)의 3각 바이오 클러스터를 구축해 역할을 분담하고, 농생명 기반 바이오 대기업 유치와 함께 마이크로바이옴 헬스 플랫폼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북대·농촌진흥청·생물산업진흥원 등 지역 연구기관과 연계해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건강·의료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점은 전북 바이오산업의 새로운 전기를 예고한다.

기후산업(Climate Tech)과 관련해서



김경수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24일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지역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는 새만금을 기후혁신 기지로 만들겠다고, 김 후보자는 총 400조 원 규모의 기후산업 투자계획도 제시했다.

국민 참여형 ‘기후펀드’(100조), 공공투자·보증자금·민간투자를 각 100조씩 유치해 새만금과 서해안 RE100 라인 구축에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군산~고창에 이르는 RE100 신재생에너지 벨트”를 조성하고, 이곳에서 생산된 친환경 전력을 수도권과 호남의 첨단산업(반도체·AI 등)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클

러스터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원전회귀 정책으로 동력을 잃었다”고 지적하며,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재정비하고, 국제공항·이차전지 콤플렉스·자율주행 특화단지 등 핵심 인프라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국가사업”이라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방향이 흔들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간 대공법에서 배제되어 낙후된 전북의 광역 교통망과 관련해서는 동서 광역교통망을 구축하여 “전북의 숨통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전북 내륙과 동해권을 연결하는 동서 교통축 구축도 공약의 핵심이다.

김 후보자는 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는 “전북권 20년 숙원사업”이라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이 철도가 개통되면 전주~부산 이동시간이 3시간대 → 2시간 이내로 단축된다고 말했다.

새만금~포항 고속도로는 전주~무주 구간이 미반영 상태인 만큼 “국가계획에 조속히 반영해 완전 개통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군산~목포를 잇는 서해안 광역철도 신설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최근 서울을 제치고 유치에 성공한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추진과 관련하여 정부가 꼭 함께하겠다고, 김 후보자는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에 대해 전폭적인 정부 지원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전북도 혼자 외롭게 싸우게 하지 않겠다”며, “법정부 TF 구성, 올림픽 관련 인프라 예산 우선 배정,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성공적인 유치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대선 경선 후보는 끝으로 “전북은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상징이자 시험대”라며 “정책의 말 잔치가 아니라, 실천력 있는 경제 대통령으로 전북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말하며 참석한 권리당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만호 기자

“문 전 대통령 기소는 정치 검찰의 폭주”

민주 도당 “검찰개혁 막기 위한 정적 시도”... 민주 대선 경선 후보들, “정치 보복” 일제 비판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이원택)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동연 전북도당 수석대변인은 24일 발표한 성명에서 “검찰이 국민의 심판을 앞두고 또다시 선을 넘었다”며, 이번 기소를 “검찰개혁을 막기 위한 마지막 정치적 시도”라고 규정했다.

김 대변인은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검찰개혁은 검찰의 자의적 행태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였다”며, “윤석열 정권에서 개혁이 후퇴했지만, 다시 바로잡을 시간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이 현 정권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는 침묵하면서도 전직 대통령을 기소한 것은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낸 행위”라고 지적했다.

전북도당은 오는 6월 3일 대선을 “내란을 끝내고 공정한 법치를 회복하는 출발점”이라며, “정치 검찰의 시대를 끝내기 위한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도 문 전 대통령의 불구속 기소와 관련, 일제히 “정치 보복”이라며 검찰 수사권 축소를 빼 들었다.

이재명 후보 캠프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에 의한 전 정부 탄압이자 정치 보복이 명백해 보인다”고 밝혔다.

김경수 후보는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정치 검찰 행태를 도저히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기소권만 남기고 수사 검찰, 정치 검찰은 완전 해체가 답이다”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맡았던 김동연 후보는 페이스북에 “분노가 치민다”라며 “석방된 내란수괴에게는 항고도 못한 검찰이 퇴임한 전 대통령에게 광기의 칼을 꺼내들었다”라고 적었다.

김 후보는 “윤석열은 파면돼도 윤석열 검찰은 그대로이다”라며 “검찰, 해체 수준으로 반드시 뜯어 고쳐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이오숙 본부장이 24일 오전 전북자치도청 기자회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전북소방, 축사 화재 예방체계 전면 개편

고위험 축사 집중관리 본격화... 축사화재안전조례 제정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가 축사 화재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고, 화재 위험도가 높은 축사를 중심으로 집중 관리에 나선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 축사에서 총 233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돈사(79건)와 계사(65건)에서 발생한 재산피해가 전체의 9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이오숙 본부장은 24일 오전 도청 기자회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북소방본부는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예방 행정을 위해 지난 3월 말부터 4월 중순까지 도내 돈사·계사 1,962개소를 전수조사하고, 화재 위험도를 A부터 D까지 4단계 등급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분류 기준은 △시설 노후도 △건축 규모 △건물 간 거리 △소방서 접근성 △과거 점검 이력 등 5개 항목을 계량화해 적용했으며, 그 결과 A등급은 2개소, B등급 285개소, C등급 725개소, D등급 950개소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돈사와 계사에서 발생한 21건의 화재 중 85%가 C·D등급 축사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고위험군 축사를 중심으로 한 선별적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됐다.

전북소방본부는 올해부터 등급별로 차등화된 화재 예방 조치를 본격 추진

한다.

B등급 이상은 서한문 발송과 월 2회의 안전 문자 발송 등을 중심으로 한 기본관리 체계를 유지하는 반면,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C·D등급에 대해서는 화재안전조사와 현장방문행정, 순찰 및 훈련이 대폭 강화된다.

화재안전조사는 기존 전체의 5% 내외에서 C·D등급을 대상으로 최대 20%까지 확대되며, 전기 분야와의 합동점검도 병행된다. 특히 D등급 축사는 간부급 소방공무원이 연 1회 이상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전기시설 개선을 권고하고, 실습형 안전교육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화재 예방 순찰과 현지 적응훈련도 C·D등급 축사에 집중되며, D등급 대형축사는 산별 예방 순찰과 연계해 집중 점검한다.

전북자치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나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 전염병 발생으로 현장 접근이 제한되는 상황에도 화재 예방 활동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전국 최초로 전북특별자치도 축사시설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2025년 하반기 제정해, 예방계획 수립, 시설지원, 종사자 교육 등 화재 예방 행정의 법적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호남 메가시티 구상
전북은 공약서 실종”

조국혁신당 도당
이재명 공약 비판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정도상)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호남권 메가시티 공약에 대해 전북이 사실상 소외됐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박성수 정책실장은 24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메가시티 구상은 광주·전남 중심의 클러스터에 집중돼 있고, 전북은 단순한 연결 지점이나 부속적 지위에 그치고 있다”며 “전북특별자치도의 위상과 독립적인 발전 전략은 공약에서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공약에 따르면 광주와 나주는 AI 및 에너지 산업의 핵심 지역으로, 전남 지역은 해양·관광·문화 분야에 전략적 투자가 집중된다. 반면 전북은 군산 조선소 재가동,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 등 과거 공약의 재탕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 실장은 “전북은 여전히 중심이 아닌 주변으로 밀려나 있으며, 실질적인 산업 주도권이나 정책 우선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전북 고유의 성장축을 세우고 독립적인 발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 후보가 과거 강조한 ‘전북 3중 소의’ 문제의식은 이번 공약에서 반영되지 않았다”며 “정당을 떠나 전북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만호 기자

정종복 도의원,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종복 의원(전주3)은 24일 제418회 임시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자원봉사 활성화와 봉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자원봉사관리자’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고, 매년 11월 5일을 ‘자원봉사관리자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정치적 중립성 유지와 신분상 불이익 방지 등을 통한 자원봉사센터장의 업무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에 따라 자원봉사센터장의 임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만호 기자



25일 사직 이서빈 도 정책협력관 “전북-중앙 잇는 가교역할에 최선을”

“아직 끝나지 않은 전북의 과제, 끝까지 응원할 것”

전북자치도정과 국민의힘 등 중앙정치권을 잇는 ‘가교 역할’을 자처하며 국민의힘 소속으로 전북도 정책협력관으로 활약해 온 이서빈 전북특별자치도 정책협력관이 25일자로 사직한다.

이 협력관은 지난해 8월 임명된 이후 8개월여간 도정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와 대공법 등 법안 통과 지원 등에서 국민의힘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등 활발히 활동해 왔다.

그러나 최근 정치 지형 변화로 입지가 좁아지면서 정책협력관 역할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

이 협력관은 정책협력관 재임 기간 중 가장 보람된 성과로 새만금 개발사업 관련 예산 확보와 대도시권 광역교통법(대광법) 통과를 꼽았다.

그는 “예결위 소속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과 소통하면서 전북도의 주요 현안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냈습니다. 단순히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전북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예산이 왜 필요한지, 무엇을 하려는지



자 역할을 다 수행했다.

이 정책협력관은 전북은 전통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라서 국민의힘 소속 정책협력관으로 활동하는 데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 정서상 저희 당 출신 시·도 의원은 대부분 비례대표다. 그만큼 지역 현안에 깊숙이 관여하거나 도정과 협력하기 어려운 구조다. 그래도 전북 도민들께서 ‘국민의힘도 전북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인식 개선을 위해 도민과 당 사이에서 꾸준히 ‘소통 창구’의

역할을 자임하며 가교역할에 최선을 다했다.

이 협력관은 사직을 앞두고 가장 아쉬운 점으로 남원 제2 경찰학교 유치 사업이 마무리되지 못한 점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과 긴밀히 협의하며 나름대로 기반은 다져왔다.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저는 떠나지만 이 과제는 반드시 완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직 이후 이 협력관은 본래 소속인 국민의힘 소속 당직자로 복귀할 예정이다. 그리고 전북에서 정치권 활동을 이어갈 가능성도 열렸다.

이 협력관은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잖아요. 내년 지방선거나 이번 대선 결과를 지켜보며 제가 말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또 나설 생각”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25년간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을 거쳐 국민의힘과 함께하면서 항상 전북을 중심에 두고 힘써 일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제도권 안팎에서 전북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찾겠다”고도 했다.

/이만호 기자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지원 조례, 도의회 상임위 가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1)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조례안’이 제409회 임시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돼 제2차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제정안이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북자치도에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에 필요한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조례 주요 내용은 △자율주행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 운영을 위한 플랫폼 및 자율주행 시설 설치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 운영 재정지원 등이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2022년부터 도내 군산, 익산 및 군산-전주 일원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받아서 자율주행 여객 및 화물운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